

2024년 제4차 광주매일신문 독자권익위원회

광주매일신문 제9기 독자권익위원회(위원장 강동완)는 25일 오전 본사 TV 스튜디오에서 ‘2024년 제4차 독자권익위원회’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. 이날 회의는 ‘2025 광주·전남 주요 이슈 전망 및 지역 경제의 미래와 대책’을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지면 제작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. 독자권익위 회의 내용을 정리한다. /편집자註

“차별화된 기획·심층보도로 지역사회 선도적 역할을”

◇제9기 독자권익위원

〈기나다순〉

- ▲강동완 前 조선대 총장(위원장)
- ▲김경대 광주대 대외협력처장
- ▲김영기 광주사회복지협의회 회장
- ▲김현성 광주경제진흥원 상임이사(대표)
- ▲박웅 광주경찰청 안보수사과장
- ▲오주섭 광주경찰청 사무처장
- ▲윤경철 전남대병원 부원장
- ▲윤창욱 광주수시시설관리공단 감사실장
- ▲정진희 광주여성단체협의회장



광주매일신문 제9기 독자권익위원회는 25일 오전 본사 TV스튜디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‘2025 광주·전남 주요 이슈 전망 및 지역 경제의 미래와 대책’이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. /김영근 기자

▲강동완 위원장=올해 마지막 독자권익위원회 회의다. 올 한해 동안 우리 지역에서는 많은 현안이 논의됐다. 광주·전남이 한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언론 미디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. 광주매일신문이 2025년 선도적으로 취재·보도했으면 하는 다양한 안건을 다뤄봤으면 한다.

▲정진희=‘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’이라는 말이 있다. 우리의 소중한 문화, 특히 전통음식에 대한 관심이 다음 세대에도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. 흔히 우리 삶을 생로병사(生老病死)로 이야기한다. 죽고 사는 것, 나이 드는 것은 인간이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 건강한 몸이 만들어진다. 광주만이 지닌 맛과 음식 문화가 잊혀지지 않고 다음 세대에도 잘 보존되고 계승될 수 있도록 언론에서 이와 관련한 보도에 관심 가져줬으면 한다.

▲김현성=지역 식품 산업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. 우리는 현재 지나치게 음식을 표준화하고 있다. 특히 김치 산업과 관련해 하나의 김치를 내세우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. 제조도 중요하지만 브랜딩 마케팅이 관건이다. 가장 큰 경쟁력은 상품화다. 그리고 이를 소상공인에 어떻게 기술이전을 시킬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. 광주·전남 식품산업

은 다양성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. 창작과 창업으로 ‘창창한 광주’를 만들자고 이야기해온 바 있다. 지역 일자리 생태계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로드맵이 필요하다. AI·모빌리티를 비전으로 삼고 있지만, 일자리 탄력도를 높이고 유연한 운영이 가능한 방법은 ‘커머스 중심’ 도시를 향해가는 것이다. 소상공인들의 상품화를 지원하고 이를 입점시킬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우선이다.

▲김영기=지역에서 환경을 복원하는 것에 대한 많은 노력이 이어져오고 있다. 복원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의 것을 더 이상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. 환경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재활용을 많이 든다. 재활용 공장을 두는 등 시설이 갖춰져 있음에도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준법정신이 투철한 사람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. 언론에서는 어떠한 점이 문제인지 파악하고 이를 지적해줘야 한다. 이와 더

불어 너무 자각적인 것만을 부각하지 않고 미담 사례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유산을 지키는 사람들을 조명하는 등 희망적인 소식을 전달해줘야 한다.

▲오주섭=올 한해 광주·전남을 되돌아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다. 군공항이

것인지 구체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. 우리 지역사회가 시민들의 아픔을 보듬으면서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. 지난 1년 간 광주매일신문은 타 매체에 비해 행정에 관한 비판적 보도와 사실 등을 적극 보도해왔다. 올해 총 4차례에 걸쳐 나온 이

김치 등 광주 식품산업 다양한 관점서 브랜딩 고민해야
행정통합·공공의료 분야 등 지역 현안·발전방안 점검
세계유산 ‘무등산’ 활용...국제적인 관광도시 조성 기대

전 문제, 다가올 2026 지방선거 대비, AI 인공지능 사업 에타 과정 등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산적해있다. 새로운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 기존 업체들의 정착을 돕는 것이 우선이고, 광주·전남이 행정 통합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. 아울러 기존 공공의료 분야를 잘 들여다보고 이를 어떻게 준비해나갈

야기들이 긴 호흡의 기획기사, 심층보도로 다뤄졌으면 좋겠다. 이를 통해 지역사회 이슈를 선도하는 역할을 했으면 한다.

▲윤경철=광주는 비교적 의료사업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다는 장점을 지닌 반면, 산과나 소아중증 등 필수의료 체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빈약하다.

올해 의정갈등으로 인프라가 붕괴되고 응급의료 수준이 열악한 상황이다. 단순히 의과대학 신설이나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. 어려움에 처한 의료 현실에 대해 조금 더 높은 차원의 고민을 해봐야 할 시점이다. 이와 함께 광주 주력 사업 중 하나인 첨단 재생의료 현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. 현재 규제특구 신청으로 예비선정 단계인데, 본 선정까지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지역 언론에서도 함께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.

▲박웅=광주 지역 내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높여야 한다. 현재 광주는 10명 중 8명이 자차로 출근할 만큼 공공 교통수단 분담률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. 그럼에도 관련 사업 진척은 더딘 상황이다. 현재 지하철 2호선 공사가 진행 중이다. 원래대로면 2026년에 1차 개통을 하기로 돼 있는데, 예산은 삭감되고 공사도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다. 시민 불편은 물론 교통안전까지 위협하는 등 공사 피로감이 극심한

상태다. 정치계, 시민사회 등 지역사회 모두의 노력으로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. 언론에서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 건강한 비판의 장을 마련해서 광주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.

▲윤창욱=올 한해 가장 기억에 남는 두 가지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, 지하철 공사로 인한 불편함이다. 광주시에서 여러 가지 행정을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, 한 사람의 시민 입장에서 피부로 느껴지는 성과를 이뤄내는 것은 어려운 것 같다. 현재 광주시에서 ‘책 읽는 광주’ 사업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가야타이거즈 한국시리즈 우승 이후 야구장과 3곳의 복합쇼핑몰,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잇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. 하지만 이런 것들로는 부족함이 느껴진다. 광주에서 내세울 만한 자원을 생각해봤을 때, 무등산이 떠오른다.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선정된 무등산은 세계적인 자원이다. 이를 활용해 세계 곳곳에서 찾아올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. 언론 보도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주면 좋겠다.

▲김경대=급변하는 사회 속 쿠광이라는 유행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가 생겨나면서 일부 자영업자들은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. 이제는 추억이 된 90년대 비디오 가게나 동네 목욕탕 등 이 시대에 맞는 또다른 대안이 필요하다. 특화거리를 만들어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지역에 맞는 소상공인을 발굴하는 등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현실적인 지원이 절실하다. 아울러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후 광주·전남 경제와 산업의 미래와 대책을 세워야 한다. 이 지역 대미 수출에서 기아, GGM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72.8%로 매우 높다. 미국 자국 중심주의 강화로 자동차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가전제품에 대한 관세 상승 가능성도 우려된다. 미국 외 다른 시장으로의 수출 다변화를 통해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고 글로벌시장 경쟁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. /정리=최명진 기자



정치참여의 기회를 갖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치후원금



모두 함께
세상을 바꾸는 노력

정치자금(기탁금, 후원금) 기부 연말정산

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
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%까지 세액공제
(3천만원 초과금액은 25%까지)

※개인별 소득 및 결정세액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
연말정산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으로 문의(국번없이 126)

기탁한도

- 1회 1만원 이상
-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

후원한도

- 중앙당 및 국회의원후원회: 각 500만원까지
- 시·도회의의원후원회: 각 200만원까지
- 자치구·시·군회의의원후원회: 각 100만원까지
- ※ 1인당 연간 총 2,000만원 초과 기부 불가

2024년 7월 1일부터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설립하여
운영할 수 있게 되어 지방의회의원에게도 후원금 기부가 가능합니다.



정치후원금센터
바로가기
www.give.go.kr

